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의지 재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서 5·18과 촛불 정신 계승 천명 "헬기사격·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5·18정신 헌법전문에... '임 행진곡' 제창으로 갈등 끝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적폐(積弊)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 정부의 뿌리를 5·18정신과 촛불집회에서 찾으며 과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정부 주관 공식행사서 5·18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잘못된 역사와 그로 비롯된 산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고,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일 광주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헬기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헬기사격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전일빌딩내 시민군을 향해 난사한 사건을 말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7년 만에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총탄 흔적으로 신군부의 헬기 사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토대로 계엄군에 의해 헬기를 동원한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에 담자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 반복됐던 갈등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부가



유가족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일어서서 부르는 '제창'으로 불렀다가 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바뀌면서 참석자 중 희망자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바뀌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

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검찰 앞두고 사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2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감찰을 받고 퇴진하게 된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오전 8시23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 국장도 같은 날 오전 8시42분께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

문재인 대통령 감찰지시 하루만에... "성실히 임할 것" 지난달 21일 저녁 자리서 '격려금' 서로 주고 받아 법무부 "감찰 그대로 진행...사의 수리 안 할 듯"

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이 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수사팀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

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받은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이후 각계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수사책임자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의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격려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one of them)으로 검찰국 관계

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판은 사드라들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감찰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장은 안 국장,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이 지검장을 각각 감찰하고,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 출처와 배경을 감찰의 주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이들에 대한 감찰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감찰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내더라도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게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고... 행복한 교육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지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